

신국가 형성기 한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시민의식
Citizenship Awareness in Korean Textbooks of Korea's State Building Period

김영인(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문제 제기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난 1940년대 후반기~1950년대 초반기 신국가 형성기의 우리 사회는 식민지 잔재와 봉건 유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을 안고 있었다. 당시 한반도의 정세는 제2차 대전에서의 일제의 패망과 38선의 획정, 미.소의 진주 등으로 새로운 격변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반도에 강력한 영향세력으로 등장한 미국과 소련은 한민족 내의 정치적, 사상적 대립을 가속화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38선 이남은 자본주의 진영, 소련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38선 이북은 사회주의 진영에 급속도로 편입되면서 각각의 사회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은 세력도 이질화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38선 이남은 미군정 체제가 수립되었고, 서구 민주주의 도입과 정착, 이를 토대로 한 민주국가의 건설을 주요과제로 삼았다. 한반도 전체의 통일국가 건설이 좌절되자, 1948년에 38선 이남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신국가가 수립되었고, 38선 이북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체제가 들어섰다. 대한민국은 미군정에 이어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민주국가의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이었다. 봉건의식과 식민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 없이는 민주국가 수립이라는 신국가 형성의 과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미군정 이래 신국가 형성기에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학교교육을 통한 노력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미군정기는 학교의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을 기본 바탕으로 민주국가의 공민 양성과 민족주의에 입각한 주체성 함양으로 설정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일제잔재의 청산, 평화와 질서유지, 새나라 민주시민 육성으로 구체화하였다(허강 외, 2000).

민주국가 수립에 토대가 되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신국가의 교육적 노력은 교과서를 통해서 본격화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교과서는 국가의 교육이념이나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이며 도구인 동시에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이영덕, 1968,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http://www.textbook114.com>에서 재인용). 교과서를 통해서 식민지와 봉건사회의 잔재를 없애고 신국가의 공민에 필요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신국가 형성기의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교과서의 민주시민의식 형성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교과서 중에서도 사회과(사회생활과)의 공민 또

는 일반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다. 공민 또는 일반사회 과목은 여러 교과목 중에서도 민주시민 양성을 직접적인 교과목표로 하여 설치된 과목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본 글에서는 신국가 형성기의 사회과 공민(또는 일반사회)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시민의식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민주시민의식의 내용구성

민주시민의식은 단순히 언어적으로 보면 민주시민이 지니는 의식이다. 이때의 민주시민은 민주사회의 운영에서 주권을 지닌 구성원으로서 주체를 의미하며, 의식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 인식하는 작용 또는 삶이나 역사와 같은 대상에 대한 올바르고 제대로 된 인식이나 판단을 의미한다(Daum, 한국어사전). 따라서 민주시민의식은 민주시민으로서, 삶, 사물, 사회현상과 운영, 역사 등에 대한 올바르고 제대로 된 인식이나 판단을 의미한다. 이 의미에 포함된 '올바르고 제대로 된'에 따르면, 민주시민의식은 현상태이기보다는 규범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의식은 민주사회의 주권자이자 주인으로서 민주시민이 지녀야 하는 당위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것이다.

아울러 민주시민의식은 단순히 '올바르고 제대로 된 인식이나 판단'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민주시민의식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민주시민이 민주사회의 주인으로서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의 책무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이 이와 같은 책무성을 다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민주주의를 위한 행위와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시민의식은 행위와 실천을 전제로 하는 행위성향 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의식, 생각만으로는 민주주의 가치와 원리가 지켜지고 발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의식의 이런 특성 때문에 민주시민의식은 민주시민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Lasswell, 1962).

민주시민의식, 즉 민주시민성은 다양한 차원의 내용을 지닌다(김영인, 설규주, 2014).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삶의 모습이 하나가 아니고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도 다차원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다차원성으로 인해 민주시민의식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논쟁적인 측면이 있다. 민주시민의식의 구성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하다. Lasswell(1962)의 경우는 시민책임, 연대의식, 주체적 참여를 전제로 개방적인 자아와 온화한 개성, 다양화된 가치의 공유, 인간잠재력에 대한 신뢰, 준법정신, 질서의식을 들고 있으며, Butts(1998)는 정의, 평등, 권위, 참여, 진실, 애국심, 자유, 다양성, 사생활 존중, 절차이행, 재산, 인권 등의 12개 덕목을 들고 있다.

Branson(1998)은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요소로 시민적 지식, 시민적 능력, 시민적 성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의 시민적 지식은 민주시민들이 알아야 할 지식적 내용이고 시민적 능력은 시민적 지식을 활용하는 지적 능력과 사회의 제반 과정에의 참여능력을 의미한다. 시민적 성향은 민주시민의 성격 특성으로 사적 성향과 공

적 성향으로 나뉜다. 사적 성향은 도덕적 책임성, 자기훈련, 개인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존중 등으로 구성되고, 공적 성향은 용감한 시민정신, 법의 지배 존중, 협상, 화해 등으로 구성된다. Cogan과 Derricott(2000)은 민주시민의식의 구성요소로 국가정체성, 권리의식, 책임과 의무감, 정치적 관심과 참여, 사회적 가치 수용을 들고, 2009 국제시민교육 연구(ICCS 2009 : International Civic & Citizenship Education Study 2009)에서는 민주시민의식을 시민지식, 시민태도, 시민참여의 세 영역으로 측정하고 있다(김태준 외, 2011에서 재인용).

한국 학자들도 민주시민의식의 구성요소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손봉호 등(1999)은 참여의식, 공동체의식, 개방(관용)의식, 타협과 협상, 중용정신을, 김왕근(2000)은 공동체의식, 법의식, 의사결정능력을 민주시민의식의 구성요인으로 보고 있다. 오영태(2001)는 민주시민 자질의 기본개념으로 인권존중, 책임성, 참여태도, 준법성, 애국심을, 배한동(2001)은 정치관심도, 정치적 성향, 정치효능감, 정치참여의식, 타협과 설득의식, 다수결의 원칙에 관한 의식, 비판과 저항의식, 질서의식, 준법정신, 책임의식, 권위주의 탈피 의식, 민주주의 실현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 정성호(2002)는 공동체의식, 준법의식, 대화와 타협의식, 사회봉사의식, 권리의식, 장애인 보호의식을, 김영인(2005)은 준법의식, 공동체의식,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관용적 태도, 사회참여의식을, 지은림과 선광식(2007)은 준법의식, 사회적 의식, 책임의식, 참여의식, 봉사의식, 평등의식을, 최응렬과 이재영(2008)은 권리와 자격의식, 책임과 의무감, 참여의식, 사회적 가치 수용, 국가의식, 국제관계 및 역사의식, 정치신뢰도, 관용성, 평등의식, 권리 및 책임의식, 참여의식을, 모경환 등(2010)은 참여의식, 관용의식, 정치효능감, 준법의식, 봉사의식을 민주시민의식의 구성요소로 정리하고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주시민의식의 구성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본 글에서는 다양한 견해의 공통부분을 바탕으로 최소 범주화 하기 보다는 가능하다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최대 범주화 하여 민주시민의식 구성요소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하는 민주시민의식을 포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민주시민의식의 구성 차원을 민주시민 지식과 이해, 민주시민 태도와 가치, 민주시민 참여와 행위로 범주화 할 수 있다. 민주시민의식은 주로 정치와 관련해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를 흔히 민주정치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용례에서 보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민주주의 원형으로 여겨지는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보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처음에는 정치원리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세기 이후 민주주의는 정치영역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작동되는 생활원리로 확대되었다(김영인, 설규주, 2014).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산을 고려하면, 민주시민의식은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영역, 사회문화영역에서도 요구되는 민주시민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 지식과 이해, 태도와 가치, 참

여와 행위 같은 민주시민의식의 구성요소가 성립될 수 있다.

3. 분석대상 교과서와 분석틀

1) 분석대상 교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고등사회생활과 공민영역 교과서로 교수요목기의 세 권(정치 1, 경제 2)과 제1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직후의 두 권(문화 2)이다. 분석대상의 교과서에 대한 기본정보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분석대상 교과서

교과서명	대상학년	저자	발행년도	출판사	유형	분량
고등사회생활과 정치문제	고등학교 1학년	유진오	1954수정 (1949발행)	일조각	검정교과서	197쪽
고등사회생활과 경제문제	고등학교 2학년	홍우	1953	일조각	검정교과서	150쪽
고등사회생활과 공민 경제생활	고등학교 2학년	최호진	1953	동국문화사	검정교과서	116쪽
고등학교 사회생활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	고등학교 3학년	한태연	1956	일한도서출판	검정교과서	80쪽
고등학교사회과 문화의 창조	고등학교 3학년	이재훈	1956	일조각	검정교과서	98쪽

2) 교과서 분석의 틀

민주시민의식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준거가 필요하다. 앞에서 탐구한 바에 따르면, 민주시민의식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영역에서 민주시민 지식과 이해, 태도와 가치, 참여와 행위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 영역은 정치교과서, 경제 영역은 경제교과서, 사회문화 영역은 사회문화교과서를 중심으로 민주시민의식의 하위요인인 지식과 이해, 태도와 가치, 참여와 행위가 어떻게 서술되어 설명되고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지식과 이해의 분석은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주요 주제에서 어떤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한다.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주요 주제로 정치영역에서는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에 대한 기술과 설명,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술과 설명, 지방자치와 시민사회에 대한 기술과 설명, 국가와 정부체계에 대한 기술과 설명, 정치현실과 정치발전에 대한 기술과 설명을 설정하여 분석한다. 경제영역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기술과 설명, 시민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주요 주제로 설정하여 어떤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사회문화영역에서는 민주주의

에 대한 기술과 설명, 시민사회와 시민참여문화에 대한 기술과 설명을 주요 주제로 설정하여 내용을 분석한다.

태도와 가치의 분석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기술하고 설명하는가를 정성적으로 살펴본다. 정치영역에서는 인간 존엄성 존중과 인권의식, 개인의 가치 존중과 공동체의식의 조화, 정치적 다양성 인정과 관용, 주권자로서 권리의식과 책임, 준법정신과 질서의식,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경제영역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 경제활동에서의 자유와 책임의식, 재산권의 존중과 책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사회문화영역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식의 조화, 다양성 인정과 관용, 시민참여와 사회봉사 의식, 문화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참여와 행위의 분석은 민주시민의식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고 설명하는가를 정성적으로 살펴본다. 정치영역에서는 정치참여와 행위를 중심으로, 경제영역에서는 개별경제주체로서 경제참여와 행위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영역에서는 일상 사회생활에서의 사회문화참여와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상의 분석준거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교과서 분석의 틀

영역 요인	정치영역 (정치교과서)	경제영역 (경제교과서)	사회문화영역 (사회문화교과서)
지식과 이해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에 대한 기술과 설명에 사용된 개념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술과 설명에 사용된 개념 -지방자치와 시민사회에 대한 기술과 설명에 사용된 개념 -국가와 정부체계에 대한 기술과 설명에 사용된 개념 -정치현실과 정치발전에 대한 기술과 설명에 사용된 개념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기술과 설명에 사용된 개념 -시민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사용된 개념	-민주주의에 대한 기술과 설명에 사용된 개념 -시민사회, 시민참여문화에 대한 기술과 설명에 사용된 개념
태도와 가치	-인간 존엄성 존중과 인권의식 -개인의 가치 존중과 공동체의식의 조화 -정치적 다양성 인정과 관용 -주권자로서 권리의식과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 -경제활동에서의 자유와 책임의식 -재산권의 존중과 책임	-개인의 가치 존중과 공동체의식의 조화 -다양성 인정과 관용 -시민참여와 사회봉사 의식 -문화에 대한 태도

	책임 -준법정신과 질서의식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식		
참여와 행위	-정치참여와 행위	-개별경제주체로서 경제 참여와 행위	-일상 사회생활에서의 사회문화참여와 행위

4. 정치교과서 분석

1) 정치교과서 내용체계

분석대상 정치교과서의 내용체계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정치교과서의 내용은 국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하고 민주정치의 원리는 중간 정도에서 다루어진다. 체계상으로만 본다면 교과서는 민주주의보다는 국가주의적 뉘앙스를 강하게 풍긴다. 교과서 첫머리에 “그 중에도 나라의 고마움이란 무엇보다도 절대적이다.”(1쪽), “나라 없는 백성은 부모 없는 고아에도 비할 것이다.”(2쪽)는 문장에서도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나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강하게 교과서에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더 강조하는 입장이었다면, 민주정치의 원리, (민주정치에서의) 국가, 대한민국(또는 대한민국 헌법), 국민의 권리 의무, 국회, 정부, 법원, 지방자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로 교과서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더 적절했으리라 생각한다.

<표 3> 정치교과서의 내용체계

대단원	중단원	페이지(비중)
국가	개인과 국가/국가의 성립과 발달/국가란 무엇인가/국가의 종류	24쪽(12%)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까지/대한민국헌법	14쪽(7%)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적 권리 의무의 의미/헌법상의 국민의 권리 의무	28쪽(14%)
민주정치의 원리	국민자치/권력분립	13쪽(7%)
국회	국회의 본질/국회의 구성/국회의 권한/국회의 의사/국회의원의 지위	45쪽(23%)
정부	정부의 의미/대통령/국무원/행정 각부	32쪽(16%)
법원	법원이란 무엇인가/법원의 조직/법원의 권한	16쪽(8%)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의미와 연혁/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감독	14쪽(7%)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현하의 내외정세/6.25사변과 우리들의 각오	11쪽(6%)

2) 지식과 이해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에 대한 기술과 설명>

직접민주정치 원리와 국민의 정치능력 불신

민주정치의 원리로 국민주권, 법치국가를 전제로 국민자치(직접민주정치, 대의정치), 권력 분립(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67~79쪽). 특히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러한 직접민주정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69쪽).”라는 기술에서 보듯이 국민자치의 원리 중 직접민주정치 원리를 바람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국가의 영토와 인구의 광대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간접민주정치인 대의정치를 일반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설명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대 제국의 국민투표, 국민창안, 소환을 채택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현하의 긴박한 정치현실과 국민의 민주정치에 대한 미숙을 고려하여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시기가 되면 차차 이를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70쪽).”라고 하여 직접민주정치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쟁 후의 사정과 국민의 민주정치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직접민주정치 제도의 미도입을 수긍하고 있다. 교과서의 국민의 민주정치능력에 대한 불신은 당시의 정부의 권력분립형태에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회의 국무원(정부) 불신임은 인정하면서도 국무원(정부)의 국회 해산은 인정하지 않는 제도의 원인을 국민의 민주적 훈련이 높지 않다는 점(79쪽)에서 찾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술과 설명>

천부인권설의 부인과 평등권, 사회권 등의 미분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라는 대단원에서 기본권 사상, 천부인권 사상과 그 시비, 국민의 국가에 대한 지위(수동적, 소극적, 적극적, 주동적), 국민의 권리(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기본적 의무(재산에 관한 의무, 교육 의무, 근로 의무, 납세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에 대한 개념을 기술하여 설명하고 있다(39~66쪽). 교과서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지위에 대응해 의무(수동적 지위), 자유권(소극적 지위), 수익권(적극적 지위), 참정권(주동적 지위)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본권 사상으로 천부인권사상과 이에 근거하여 근대 기본권이 발달하였음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본권을 천부인권 또는 자연법에 근거하여 정당화 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법률 내의 권리로 국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천부인권사상을 현대 기본권 인정의 토대로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택하고 있다. 이는 “17.8세기 ‘천부인권’ 논자들은 국가나 법률보다 앞서는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였지만, 법률보다 앞서는 권리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천부인권논자들은 국가라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함을 주장한 점에 있어서는 옳았지만, 국민의 권리가 법률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 있어서는 옳지 못하였던 것이다(42쪽).”라는 기술에 잘 나타나 있다.

기본권 분류에 있어서도 큰 범주를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으로 나누고, 평등권과 근로자의 이익 균점권, 오늘날 노동3권을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자유라 하여 자유권의 하

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54~5쪽)이 특기할 만 하다. 더 나아가 청구권과 사회권(생존권)을 분리하지 않고 수익권이라는 범주로 묶어 기술하고 있다(56~60쪽). 이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현대 민주국가 들어서 나타난 사회권(생존권)에 대한 인식이 당시의 정치교과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국가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지는 책무라는 관점에서 기술되기 보다는, "일방적인 권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43쪽)."라는 기술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대응하는 부담의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의무의 유형 중 오늘날 중요시 되고 있는 환경보전의 의무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와 시민사회에 대한 기술과 설명>

지방자치의 강조와 시민사회 개념의 미등장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교과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여 지방자치에 대해 관치 지방행정과 자치 지방행정, 지방자치의 연혁,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173~186쪽). 특히, "민주정치는 국민의 자치이므로 그 지방의 일을 그 지방주민의 자치로 하게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원칙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다(175쪽).", "그러므로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를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175쪽)."라고 기술하여 민주정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다만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오늘날 제3섹터로 불릴 정도로 중요시 되고 있는 '시민사회', '시민참여'에 대한 개념은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국가와 정부체계에 대한 기술과 설명>

민주국가 대 국가주의

먼저 국가일반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1~24쪽). 천성으로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개념의 설명을 통해 국가생활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후, 법과 국가, 국가성립학설(신의설, 가족설, 실력설, 계약설, 계급투쟁설), 국가의 삼 요소(국민, 영토, 주권), 국가의 종류(군주국과 공화국, 전제국과 입헌국, 단일국과 연방국) 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가의 목적을 질서의 유지와 함께 복리 증진으로 밝히고(6쪽), "민주국가야말로 인류 역사가 도달한 최종, 최선의 국가 형태인 것이다(12쪽)."라고 하여 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주국가의 합당성을 밝히면서도 한편에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부모가 있어야 하고, 처자가 있어야 하고, 이웃이 있어야 하고, 나라가 있어야 하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도 나라의 고마움이란 무엇보다도 절대적이다(1쪽).", "나라 없는 백성은 부모 없는 고아에도 비할 것이다(2쪽).", "이상 이야기를 요약하건대 사람은 국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된다. -중략- 모든 사람은 각각 어떤 한 나라의 국민이 되어 다른 국민들과

함께 그 나라를 받들고 그 나라의 명령을 복종하는 것이다(6쪽).”라고 하여 가족주의 또는 전체주의에 토대를 둔 국가주의적 국가관에 대해 기술을 하고 있다.

민주국가는 국가보다는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복과 기본권 보장을 국가의 본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또는 시민을 우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는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발달과 민주국가의 등장을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엄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인류 역사의 진정한 출발이라고 서술하면서 민주국가가 인류 역사의 최종 최선의 국가라고 하면서도(12쪽), 한편에선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국가를 부모에 비유하거나 국가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상호 모순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의 모습은 근대 민주국가 설립의 바탕이 된 (사회)계약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부정적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계약설도 지금 생각하면 이론상으로나 실지상으로나 도저히 그대로는 이를 승인할 수 없으니, 첫째 이론상 국가라는 것을 그렇게 개인을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 그 자신의 실재와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후략- (9쪽)”

대한민국

국가 일반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수립과 헌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25~38쪽).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립 유래를 경술 국치, 기미독립선언, 카이로선언, 모스크 삼상협정, 반탁운동, 미소공동위원회, 유엔한국임시위원단, 5.10선거, 헌법 채택,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기술하고 있다. 자주적인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민족 주체적인 노력 중 3월 1일 혁명운동(26쪽)을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수립의 유래를 국제회의와 유엔 결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식민지 시대를 ‘경술 국치’, ‘일본의 침략’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그 정당성을 부인하는 듯한 기술을 하고 있지만, 한편에선 일제의 강점이나 병탄이라는 용어보다는 ‘한일합방조약(25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일제의 강점이나 병탄이 한일의 조약에 의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어 식민시대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헌국가라 하는 경우의 ‘헌’이라 함은 특히 민주적 헌법을 말하는 것이다(30쪽).”라고 하여 민주주의, 민주국가와 헌법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전문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성격으로 ‘민족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31쪽). 이런 대한민국 헌법이 성격은 곧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족주의를 봉건주의,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다음 교과서 기술에서 보는 것처럼 민족주의를 민주주의의 모태, 사민평등의 민주주의 원칙의 수립, 계급국가 사상과 대립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31~2쪽). “동시에 민족주의는 근대 민주주의의 모태가 된 것이니, 즉 민족주의는 봉건제도를 타파함으로써, 봉건국가를 지배하고 있던 봉건적 특권계급을 타파하고, 사민평등의 민주주의 원칙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민족주의는 계급국가와 대립되는 의

미를 획득하였다.”

교과서는 대한민국 헌법 상 민주주의 성격을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모든 국민의 균등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로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전문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기본정신으로 함을 선언한 것은 명백한 일인데, 민주주의라 하면 종래에는 으레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해 주는 정치적 민주주의만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우리나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균 등, 즉 경제적 평등을 확보해 주는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도 아울러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32쪽).” 마지막으로 침략주의 부인과 실력에 기반한 침략주의 격퇴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평화주의를 기술하고 있다(33쪽). 이외에도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요강(33~38쪽)에 대해 기술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에 대해서도 국회(80~124쪽), 정부(125~156 쪽), 법원(157~172쪽)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 지식 위주로 기술 설명하고 있다. 정부형태 에서는 국회에 대해 가장 많이 기술하고 있어 민주국가는 의회주의를 중시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현실과 정치발전에 대한 기술과 설명>

냉전체제 하의 반공주의와 준법, 경제재건을 통한 강력한 국가건설

교과서는 마지막 대단원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서 국내정세, 국제정세, 6.25사변, 우리들의 각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를 단지 국내정세로만 국한하여 기술하 지 않고 새롭게 형성된 세계의 냉전체제라는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38선도 결코 우리나라만의 38선이 아니라, 세계적인 38선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38선은 미소의 대립을 상징하는 것이고 미소의 대립은 전 세계에다 38선을 그어 놓은 것이다(191쪽).”라는 기술에서 냉전체제와 한반도 상황을 연관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의 사주를 받아 한반도를 공산주의화 하려는 북한의 괴뢰정권에 의해 6.25사변 이 일어났음을 설명한 다음 괴뢰정권을 격멸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전략- 우리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산 침략자들은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그들을 격멸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지 않아 서는 안된다(195쪽).”라는 기술에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나 있다.

‘우리들의 각오’라는 중단원에서는 ‘조국통일의 숙제’,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 ‘강력한 군비 건설’, ‘경제 재건’, ‘준법정신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6.25사변 이후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조국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강조는 “-전략- 반드시 이 원수의 38선을 타파함으로써 우리의 독립을 완성하여야 할 것이다(188쪽).”, “-전략- 우리들은 공 산 침략자를 격멸하고 우리나라의 통일 독립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다(196쪽).” 등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방법론으로 ‘민주국가로 의 발전’(조국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산같이 쌓여 있는 중,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를 훌륭한 민주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96쪽), ‘강력한 군비

건설'(-전략- 공산주의자들에 대비하여 언제 재침략이 있더라도 이를 물리치고 우리의 실지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군비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196쪽), '경제재건', '준법정신의 확립'(-전략- 조국의 통일 독립을 얻기 위하여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준법정신을 확립하여야 하겠다. 197쪽)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나 오늘날 헌법에 명기된 바와 같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않다.

3) 태도와 가치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치에 관련된 태도와 가치의 구성요소로 인간 존엄성 존중과 인권의식, 개인의 가치 존중과 공동체 의식의 조화, 정치적 다양성 인정과 관용, 주권자로서 권리의식과 책임, 준법정신과 질서의식,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식, 대화와 타협의식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정치교과서의 내용체계를 대단원(교과서의 '가름'), 중단원(교과서의 '마디'), 소단원(교과서의 'I, II, ...')의 제목을 중심으로 보면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태도와 가치에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다. 정치교과서 내용의 대부분이 정치에 관련된 지식과 이에 대한 이해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도와 가치에 관련된 분석은 대단원이나 중단원 등과 같은 형식 범주를 중심으로 하기 어렵고 지식과 이해에 관련된 내용 기술 중 태도와 가치 관련 문장이나 단락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전제로 각각의 태도와 가치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 존엄성 존중과 인권의식>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으로 여겨지는 인간존엄성 존중과 인권의식에 대해 교과서는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은 인간 존엄성 존중과 인권의 사상적 토대인 자연법 사상과 천부인권 사상에 대한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법치주의, 법안에서의 기본권 등을 기술하고 있는 것에서(앞의 지식과 이해 관련 부분 참조) 잘 드러난다. 물론 민주주의를 자유와 평등 사상, 국민주권 등과 관련시키고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가치가 인간존엄성 존중과 인권실현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인간존엄성 존중의식과 인권의식을 가져야 함이 교과서에서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법치(법치의 강조는 앞의 지식과 이해에서 본 내용 외에도 "민주공화국이라 하는 경우의 '민주'라는 말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보다도 '입헌' 또는 '법치'라는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다. 22쪽"라는 문장에서도 잘 볼 수 있다.)와 국가의 목적으로 질서유지와 국민복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순응 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와 법 안에서의 인간존엄성, 인권으로 격하된 감이 없지 않다.

<개인의 가치 존중과 공동체의식의 조화>

자유주의와 함께 성장해 온 민주주의는 개인의 가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의 가치 존중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것만 강조하지는 않는다. 민주공동체 또는 민주국가 없이는

개인의 가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시민의식으로 개인의 가치 존중과 함께 공동체의식의 조화를 강조한다. 민주주의에 터한 대한민국이라는 신국가 형성 이전에는 봉건적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고 할 수 있다. 봉건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의 가치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런 봉건적 특징을 탈피해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의식으로 지금까지 소홀히 되어 온 개인의 가치 존중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공동체의식과의 조화를 기술해야 한다. 민주국가와 관련해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엄'(12쪽)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개인의 가치'라는 용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도 '모든 국민' 또는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해 준 점에서 불멸의 공을 남겼다'고 평가하고는 있지만(32쪽), 이를 명확하게 개인의 정치적 자유로 연결하여 설명하지는 않는다. 기본권을 설명하는 단원에서도 기본권의 주체로 개인을 기술하지 않고, 대신에 '국민' 또는 '사람'을 들고 있다. 결국 자유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의 주체인 '개인'은 '국민' 또는 '사람'의 집단범주로 환원되어 기술됨으로써 개인의 가치에 대한 민주시민의식이 형성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반면 앞의 지식과 이해에서도 본 것처럼 국가에 대한 강조는 자주 등장하여 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가치 존중과 공동체의식의 조화는 모색되기 어려운 내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 다양성 인정과 관용>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정치적 다양성 인정과 관용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민주정치는 발전하기 때문에 민주시민도 정치적 다양성 인정과 관용 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정치적 다양성', '다양성', '다원주의', '관용'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런 민주시민의식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

<주권자로서 권리의식과 책임>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을 기본원리로 한다. 따라서 주권자로서 주권의식을 지니고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책임을 지는 자세는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교과서는 민주주의가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점을 기술하고(12, 61, 67쪽),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34쪽). 그렇지만 교과서의 입장은 주권자로서 주권의식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지식으로서 국민주권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가의 명령에 대한 복종, 법치국가로서 민주국가 강조, 국민의 미숙성 등을 내세우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국가의 주인으로서 보다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는 피치자의 입장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법정신과 질서의식>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서는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 준법정신을 지녀야 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교과서의 여러 곳에서 법치주의(또는 법치국가)로서의 민주주의(또는 민주국가), 준법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교과서 마지막 페이지(197쪽)에 “이상 몇 가지 우리들의 당면과제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나는 끝으로 준법정신의 확립을 부르짖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정치란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니, 정부나 국민이나 다 같이 법의 지배에 복종하는 곳에 대한민국의 양양한 앞길은 있는 것이다.”는 문장에 준법정신의 강조는 잘 드러난다.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식>

민주주의는 국민자치에 기반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국정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겠다는 생각과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서는 국민이 국가의사의 구성에 참가할 수 있는 주동적 지위와 이의 실현을 위한 참정권 보장을 인정하고(44쪽), 국민자치를 소개하고 있으며(67쪽), 선거에서의 기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87쪽), 시민들이 적극적인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식을 가져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정치적 관심'이나 '참여의식'이라는 용어를 교과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4) 참여와 행위

일반적으로 지식과 이해, 태도와 가치는 실천될 때 그 의미가 배가된다. 따라서 정치교과서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습득해야 하는 것으로 강조하는 지식과 이해, 태도와 가치도 시민의 참여와 행위를 통해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정치교과서에서는 실천으로서 시민의 참여와 행위에 대해서는 별반 기술하고 있지 않다. “-전략- 선거 때에는 아무쪼록 기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87쪽).”라는 기술이 있긴 하지만 이것조차도 '선거의 의무적 성질에 비추어(87쪽)' 하도록 하는 것이다.

5. 경제교과서 분석

1) 경제교과서 내용체계

분석대상이 된 두 권의 경제교과서 내용체계는 <표 4>와 같다. 두 교과서의 체계는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최호진의 교과서(이하 '경제 1'이라 함)는 대단원이 15개이고 구어체로 제목을 붙이고 있음에 반해, 홍우의 교과서(이하 '경제 2'라 함)는 대단원이 8개이고 문어적 어구로 제목이 되어 있다.

<표 4> 경제교과서의 내용체계

대단원		중단원		페이지(비중)	
최호진 저	홍우 저	최호진 저	홍우 저	최호진 저	홍우 저
경제란 무엇이며 우	경제와 경	-	경제의 뜻/경제학의	2(2%)	12(8%)

리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학		뜻		
자유경제는 무엇이며 통제경제는 무엇인가?	생산	-	생산의 뜻/생산의 종류/생산의 요소/경영/기업	4(3%)	32(21%)
우리는 왜 생산을 하는가?	교환	-	교환과 유통의 뜻/교환의 종류/가치/가격/화폐/신용/상업/외국 무역	4(3%)	46(31%)
자본이란 무엇인가?	분배	-	분배의 뜻/임금/지대/이자/이윤	2(2%)	12(8%)
우리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소비	-	소비의 뜻과 종류/소비와 생산, 소득/생산적이 아닌 소비에 관한 법칙	2(2%)	7(5%)
우리는 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자유경제와 통제경제	노동이란 무엇인가?/생산수단이란 무엇인가?	-	5(4%)	8(5%)
생산요소를 결합시키는 산업조직(기업)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국가경제	기업이란 무엇인가?/기업은 어떻게 운영되는가?/기업 사이의 경쟁/기업의 집중과 형태/기업의 결합	-	13(11%)	12(8%)
상품은 무엇이며 화폐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자원	가치란 무엇인가?/가격이란 무엇인가?/화폐란 무엇인가?	-	21(18%)	21(14%)
물가는 어떻게 변동되는가?		화폐가치/인플레이션/화폐 가치의 변동의 영향		5(4%)	
유통과 신용은 어떠한 몫을 하는가?		생산과 유통은 어떠한 관계에 있나?/금융이란 무엇인가?/금융기관/금융의 형식		9(8%)	
상업과 무역은 어떻게 운용되며 외국환은 어떻게 바뀌는가?		상업이란 무엇인가?/무역이란 무엇인가?/외국환		15(13%)	
우리는 어떻게 소득을 얻는가?		분배 및 소득의 뜻/임금/이윤/지대		16(14%)	
우리는 어떻게 소비하는가?		소비라는 것은 무엇인가?/소비와 생산과의 관계는 어떠하여야 되는가?		3(3%)	
국가의 경제생활(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재정이란 무엇인가?/예산/경비와 수입		6(5%)	
우리나라의 경제와 자원의 현상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떠한가?/우리나라의 자원의 현상은 어떠한가?		9(8%)	

2) 지식과 이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기술과 설명>

근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의 성립,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성립하고 발전하였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 1에서는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근대경제, 근대국민경제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와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근대경제의 기본특징으로 개인주의 원리에 기반한 사유재산, 경제활동 자유, 영리를 들고 이를 다시 자유경제로 정의하고 있으며(3~4쪽), 상품경제를 또 하나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8쪽). 그렇지만 “구체적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5쪽).”라고 하여 이론적인 자본주의 경제 원리가 그대로 실현될 수 없는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맥락의 연장선 상에서 “국가에서는 경제계를 통제하여 항상 무리한 생산과 신용의 남용, 유해한 소비 등을 통제함으로써 생산과 구매력을 균형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101쪽).”라고 국가의 시장개입을 합리화 시키고 있다. 근대경제 즉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상품생산, 자본(의미, 유형, 회전 등), 노동, 생산수단,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기업가, 가치와 가격, 수요공급의 법칙과 시장가격, 분배(임금, 지대, 이자, 이윤), 생산(자)과 소비(자), 화폐와 화폐가치, 인플레이션, 금융, 무역과 외국환, 재정과 예산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자본의 운동을 ‘화폐자본-생산자본-상품자본-확대된 화폐자본’으로 설명하고 있다(21쪽).

경제 2도 역시 자본주의, 자본주의 경제라는 용어를, ‘선진 자본주의국가(113쪽)’라는 용어를 한 번 사용한 것 외에는 쓰고 있지 않다. 자본주의 경제라는 말 대신 ‘자유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유재산제도, 영리의 자유, 자유경쟁을 근본원리로 제시하고 있다(111쪽). 자유경제의 지도원리와 사상적 배경을 자유주의 사상, 개인주의에 두고 있으며, 자유로운 경쟁과 이에 따른 도태 현상을 자연의 섭리라고 기술하고 있다(110~111쪽). 자본주의 경제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경제에 관련된 기본개념을 경제학 논리를 바탕으로 기술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산과 상품생산, 노동과 자본, 경영과 기업, 가치와 가격, 수요공급법칙과 시장가격, 화폐와 신용, 분배와 소득, 임금과 지대, 이자와 이윤, 소비와 저축, 자유경제와 통제경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이 그러한 개념의 예이다. 이런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개념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인 접근을 하여 지식 위주의 설명을 하고 있다.

경제 2에서도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통제경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유를 너무 제일로 부르짖는 결과는 자기 한 사람의 사리와 사익만을 첫째로 삼고 나라의 이익과 민족의 이익 즉 공익을 하찮게 보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 중략 - 모든 경제활동을 한 개인의 자유에만 맡기어 둘 수가 없다. 그런데 통제경제도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며 개인의 창의를 허락한다(112~113쪽).”라는 내용에서 보듯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를 순수 자유방임의 경제로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하여 설명한다. 단 이 때의 통제경제는 교과서에서는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경제와는 다르다.

<시민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기술과 설명>

대부분의 시민들은 소비자로서 역할을 하며 생활한다. 오늘날 '소비자 주권'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소비자가 소비자로서 어떻게 소비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경제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시민으로서 소비자의 행태, 권리와 책임, 역할 등에 대해 경제교과서가 어떻게 기술하여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경제 1에서는 열세째 가름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비하는가"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대단원 차원에서 소비에 대해 기술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전체 3쪽에 불과하여 분량은 극히 적다. 이 대단원에서 소비의 의미, 소비와 생산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지식을 다룰 뿐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기술과 설명은 없다.

경제 2에서는 소비에 대해 대단원을 설정하여 설명하고는 있으나 시민들이 소비자로서 어떤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지, 소비자의 권리와 이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술과 설명은 없다.

3) 태도와 가치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

경제 1에서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자본주의에 대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에 대한 기술이 명시적으로 없고 또 내용 체계가 경제학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 위주로 되어 있어 태도와 가치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다. 대신 국민으로서 국가경제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이므로 인플레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민은 첫째 자세를 잘 받칠 것이며, 둘째는 국채를 예정대로 소화시키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며, 셋째는 저축에 노력하여 예정액에 달하도록 분발할 것이며 다같이 소비 절약에 힘써 이 난국을 극복하여 하루 바빠 재건에 돌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116쪽)." 또 같은 페이지에서 원조경제에 대한 협력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방대한 원조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으면 안되겠다(116쪽)."

경제 2에서도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경제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와 가치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교과서 내용의 기술이 경제학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방식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교과서의 기술을 통해 보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이익을 먹고 자유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며, 나쁜 물건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또 능률이 낮은 사람은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체질되어 아래로 떨어진다. - 중략 - 아래로는 개인의 행복이 있고 위로는 한 나라 한 사회 온 세계의 행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원리

이다(110~111쪽).”라고 기술하여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서구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의 마지막 소단원 ‘우리의 각오’에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체적 조건이 따로 있다.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모든 이론과 시설이 서야 한다. -중략-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다. 즉 일민주의를 밑뿌리로 하는 우리나라다. 이 일민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하여 나간다면 경제면의 건설 또한 서광이 앞에 가득차 있음을 볼 수 있다(150쪽).”라고 기술한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경제에 접근해 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활동에서의 자유와 책임의식>

경제 1은 근대경제에서는 재산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가지되 이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근대 국민경제에 있어서는 사회가 아니고 구성원 자신이 그네들의 경제생활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생활의 유지, 확보를 꾀하지 않으면 안된다(3쪽).”, “-전략- 생산수단의 사유제도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기초로 하여, 각 개인이 자기의 경제생활에 관하여 전 책임을 지고 있다(4쪽).”와 같은 기술에서 경제활동에서의 자유와 동시에 그 책임도 당사자가 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2에서도 자유경제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 경제활동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임을 전제하고 있지만, 특별히 경제활동에서의 시민 또는 기업으로서 자유와 책임의식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재산권의 존중과 책임>

경제 1은 근대경제의 기본특징의 하나로 사유재산제를 들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궤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핵심특징인 재산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해왔다. 경제교과서 1에서도 재산권 보장을 “-전략- 이것에 의하여 얻는 물자를 소유물로 하여 사용 수익하며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3쪽).”라고 하여 강조하고 있다. 재산권의 인정에 대한 기술은 있지만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책임이 따른다는 기술과 설명은 없다.

경제 2에서도 자유경제의 기본특징으로 사유재산제도라는 용어를 간단히 언급하고 있지만, 시민으로서 재산권을 존중하고 재산권의 행사와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4) 참여와 행위

<개별경제주체로서 경제 참여와 행위>

경제 1은 개별경제주체로서 노동자, 기업가, 자본가 등의 생산활동에 대한 참여와 이에 따른 분배를 설명하고 있다(83~84쪽).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노동운동, 소비자운

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참여활동 등에 대한 기술은 없다. 민주시민으로서 노동자, 기업가, 자본가와 기업 시민으로서 기업 등의 경제 참여활동과 행위 등에 대한 기술과 설명은 찾아 볼 수 없다.

경제 2는 개별경제주체이자 행위주체로서 소비자, 기업(가), 노동자 등의 경제 참여활동과 행위에 대해 경제학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 외에 실천적인 참여와 행위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6. 사회문화교과서 분석

1) 사회문화교과서 내용체계

두 권의 사회문화교과서의 내용체계는 <표 5>와 같다. 두 권 모두 대단원의 수와 제목은 동일하다. 제1차 교육과정 체계를 따랐기 때문이다. 중단원의 체계와 제목은 다르다. 한태연 저(이하 '사회문화 1'이라 함)는 어구 형태로 제목을 붙였으며, 이재훈 저(이하 '사회문화 2'라 함)는 문장 형태로 제목을 붙였다.

<표 5> 사회문화교과서의 내용체계

대단원		중단원		페이지(비중)	
한태연 저	이재훈 저	한태연 저	이재훈 저	한태연 저	이재훈 저
현실과 이상	현실과 이상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실/사회적 현실의 개선/이상과 현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현실과 이상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우리나라 사회적 현실은 어떠한가?/사회적 현실을 개선함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18(23%)	17(17%)
학문		학문의 본 바탕/학문과 사회/우리나라 학문의 현상/	학문이란 무엇이며, 그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학문은 인간사회를 개선, 발전시키는 데에 어떠한 힘을 가지는가?/우리나라 학문의 현상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13(16%)	15(15%)
예술		예술의 본 바탕/예술과 생활/우리나라 예술의 현상	예술이란 무엇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예술은 인간생활의 개선, 향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우리나라 예술의 현상은 어떠한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11(14%)	14(14%)
도덕		도덕의 본 바탕/도덕과 법률/우리나라 도덕의 현실	도덕이란 무엇이며, 그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도덕은 법률과 어떻게 다르며, 그 사회에 미치는 힘은 어떠한가?/우리나라 도덕의 현실은	14(18%)	5(5%)

			어떠하며, 그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신념과 사상		종교/신념과 사상/인격	종교란 무엇이며, 인간생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신념이란 무엇이며, 왜 신념을 가져야 하는가?/사상이란 무엇이며, 사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인격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인격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12(15%)	19(19%)
문화의 창조		문화/개인 국가 인류의 사상/문화의 창조	문화란 무엇인가?/인간의 이상은 어디에 있으며, 국가의 이상은 어디에 있는가?/인류의 이상은 어떠하며, 인류의 이상에 공헌하는 길은 무엇인가?/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12(15%)	17(17%)

2) 지식과 이해

<민주주의에 대한 기술과 설명>

사회문화 1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내용을 특별히 기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도입과 신국가 형성 당시의 민주주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제2차 대전에서의 민주주의 국가의 승리로 인해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4쪽), '8.15 해방 이후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한 것은 민주주의적 의식이요 거리를 범람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적 정신(4쪽)'이라고 기술하면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유치원과 같은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4쪽)'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전략- 아직까지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가 국가의 주인공인지를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중략- 아직도 문맹자가 많은 탓으로 투표에는 작대기 기호를 쓴 투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선거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므로 선거 때에는 언제든지 문벌을 찾고 정실에 끌리어고 돈에 매수당하고 관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일이 일수이다(6쪽)."라고 하여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황과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이 낮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 원인을 식민지 지배와 봉건 문화의 잔재에서 찾고 있다(4, 6쪽).

사회문화 2도 사회문화 1과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지식을 거의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현실과 이상'이라는 대단원 중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실과 그 개선을 설명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현실을 기술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민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10쪽),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며(14쪽), 국민 다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며 교양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10쪽).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점령에 의해 일본 식민지 예속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민주주의가 도입되었고(8쪽), 해방 이후 모든 개혁에 있어서 근본정신은 민주주의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10쪽). 모든 개혁과 건설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정신적 준비의 미숙으로 인해 혼란과 무질서가 나타나고 있고, 민주주의로의 돌변은 너무나 비약적인 것이라라고 설명하고 있다(11쪽). “-전략- 일본의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에 따라 오는 민주주의적 개혁은 실로 급격적인 역사적 전변이었다. -중략- 이 민주주의적 혁명은 너무나 급격적이며, 점진적인 것이 되지 못한 데서 혼란은 매우 심하였다(59쪽).”라고 기술할 정도로 해방 후 민주주의 도입을 매우 급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괴뢰정권의 6.25사변의 야기에 의해 민주화가 더욱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시민사회, 시민참여문화에 대한 기술과 설명>

사회문화 1에는 시민사회, 시민참여문화에 대한 기술이 없다. 사회문화 2에도 시민사회, 시민참여문화에 대한 기술은 없다.

3) 태도와 가치

<개인의 가치 존중과 공동체의식의 조화>

사회문화 1에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의 가치 존중과 공동체의식의 조화를 이루는 민주시민으로서 태도와 가치관 형성에 대한 기술이 없다.

사회문화 2는 “개인의 자각, 혹은 개인적 자아와 인격의 자각 위에 민주주의가 성립되므로 자유와 평등은 이 자각의 내용이다(10쪽).”라고 기술하여 민주주의 있어서 개인의 가치 인정과 평등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이름 아래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12쪽)’ 사회 전체의 행복이나 개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무를 무시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이를 민주주의 정신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12쪽). 민주주의에 있어 개인의 자각을 강조하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상관성을 민주주의 윤리의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가치 인정과 공동체의식 또는 공동선의 조화는 “개인을 떠나 국가가 있을 수 없고 또 국가를 떠나 개인도 있을 수 없다. -중략- 개인의 이상은 국가의 이상이고, 국가의 이상은 개인의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87쪽).”라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도 강조된다.

<다양성 인정과 관용>

사회문화 1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이해관계의 다양성, 가치의 다양성, 종교의 다양성이 필연적인 점을 기술한 내용이 없고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성 인정과 관용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질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없다.

사회문화 2에서도 다양성 인정과 관용에 대한 기술은 없다.

<시민참여와 사회봉사 의식>

사회문화 1에서 시민참여와 사회봉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사회문화 2에서도 시민참여와 사회봉사에 관련된 태도와 의식에 대한 내용은 없다.

<문화에 대한 태도>

사회문화 1은 '문화의 창조'라는 대단원을 두고 문화의 의미와 유형, 문화의 창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화를 '생각을 가진 인간의 이상의 산물이고, 정신의 꽃(79쪽)'으로 보아,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 이에 따른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기술을 하고 있다. 문화를 정신작용의 산물로 보아 그 선진성과 후진성을 구분하고 유럽 문화는 선진적인 것, 한국문화를 포함한 동양문화는 후진적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민주주의 관점에서 필수적인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를 교과서의 진술에서 찾아 보기 어렵다. "동양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문화는 오로지 종교문화로서, 유 유럽 문화와 같은 과학성을 가지지 않는 것을 또한 그 특색으로 한다. 따라서 오늘날에 볼 수 있는 동양사회의 후진성은 동양문화의 이러한 비과학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73쪽).", "인종과 민족에 따라서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인종과 민족의 성쇠와 함께 그 문화도 식물적으로 초년기, 청년기, 장년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후략- (79쪽)"

사회문화 2는 '문화의 창조'라는 대단원에서 문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만 문화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나 문화의 다양성 인정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라는 단원에서 "각국이 각자의 역사와 전통의 지반 위에 서서 각각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세계문화를 풍부히 하며, 각국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통하지 않고는 세계 문화에 공헌하기가 어렵다.(97쪽)"라고 하여 각 나라 문화의 특수성과 고유성, 개성 등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4) 참여와 행위

<일상 사회생활에서의 사회문화 참여와 행위>

사회문화 1에서는 일상 사회생활에서의 민주시민(국민)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사회문화 발전에 참여하는 실천적 행위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사회문화 2에서도 일상 사회생활에서의 참여와 행위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7. 글을 마무리하며

신국가 형성기에 사용된 다섯 권의 사회과 교과서를 민주시민의식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 우리 사회는 신국가로서 민주국가 수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었다. 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식민잔재와 봉건유습을 타파하고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과업을 수행했다.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은 주로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 학교교육의 다양한 교과목 중에서도 사회과는 민주시민 육성을 직접적인

교과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사회과 교과서를 민주시민의식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교과서 모두는 민주주의(자본주의) 또는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해서 학문적 지식 위주의 기술과 설명을 하고 있었다. 특히 정치교과서와 경제교과서는 정치학, 경제학 개론서와 같은 개념 중심의 내용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태도와 가치, 참여와 행위 영역에 대한 기술은 매우 적었다. 특히 민주시민으로서 참여와 행위에 대해서는 기술과 설명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전무하였다. 둘째, 국가주의적, 반공주의적 입장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 식민지 지배라는 나라 없는 설움과 6.25사변이라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직후의 시대적 상황을 교과서가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민주주의를 준법, 법치와 강하게 결부시키고 있었다. 법 안에서의 기본권, 준법정신을 통한 질서 유지 등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인 기본권 존중과 인권의식, 국민자치와 주권 등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오늘날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시민참여와 정치적 관심, 시민사회, 다양성의 인정과 관용 등의 용어는 사용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분화의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용어 자체를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다섯째, 해방 이후 민주주의 도입을 급격한 격변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국민들의 민주시민으로서 의식과 수준이 낮아 민주주의 도입과 정착이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었다.

<참고 교과서>

유진오(1954). 고등공민 정치문제. 서울 : 일조각.

이재훈(1956). 고등학교 사회생활과 문화의 창조. 서울 : 일조각.

최호진(1953). 고등사회생활과 공민 경제생활. 서울 : 동국문화사.

한태연(1956). 고등학교 사회생활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 서울 : 일한도서출판.

홍우(1953). 고등 사회생활과 경제문제. 서울 : 일조각.

<참고문헌>

김영인(2005). 청소년의 불안 핵폐기장 갈등 참여와 시민의식 형성의 관련성 고찰. 청소년학연구 12(1), 161~182.

김왕근(2000). 시민의 정치의식과 시민교육의 원리. 민주시민교육논총 5. 31~53.

김태준 외(2011). "세계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시사점." 한국HRD연구 6(2), 25~41.

모경환 외(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42(1), 77~101.

배한동(2001). 한국 대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정치학회보, 9(2),

227~260.

손봉호 외(1999).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윤리. 시민교육연구 28, 1~44.

손승남(2000).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의 모색. 한독교육학연구, 5(1), 81~98.

오영태(2001). 사회과 수행평가의 채점기준 연구-민주시민의 자질 특정을 중심으로-.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논총 18, 89~115.

전득주 외(1999).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 유평출판사.

정성호(2002). 한국인의 시민의식 현황과 과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41, 147~164.

지은림, 선광식(2007).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39(4), 115~134.

최응렬, 이재영(2008).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2, 401~436.

최장집(1996). "한국의 민주화, 시민사회, 시민운동." 크리스찬 아카데미편. 한국시민사회의 이해. 서울 : 한울. 9~46.

허웅 외(2000). 한국편수사연구 1.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0-4.

Branson, M. S.(1998). The Role of Civic Education. Center for Civic Education.

Butts, F.(1998). The Morality of Democratic Citizenship : Goal for Civic Education in the Republic's Third Century, Calabasa, C. A.: Center for Civic Education.

Cogan, J. J. & Derricott, R.(eds.)(2000). Citizenship for the 21st Century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ducation. London : Kogan Page.

Daum 한국어사전. <http://dic.daum.net/index.do>

Lasswell, H. D.(1962). Power and Personality. New York : The Viking Press.